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 2025~2029

2024. 12.



교육부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고등교육 여건 진단 .....	2
III.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 .....	4
1.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2. 대학의 재정 여건	
IV.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	10
1. 추진 체계도 및 재정지원 구조	
2. 3대 재정지원 전략	
V. 중점 재정지원 과제 .....	20

# I. 추진 배경

## □ 수립 배경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5~'29)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을 결정
-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 여건, 재정지원 배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및 성과관리 등 법정 사항을 포함
- ※ 고등교육 재정 투자 10개년 기본계획 이후, 제1차 5개년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이행 중

### [참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주요 추진 경과

- 고등교육 재정 투자 10개년 기본계획 수립('10.11)
  - \* (주요 전략) 대학별 특성화 유도, 학생 및 연구자 단위의 지원 확대, 고등교육 질 관리 및 규제 완화
-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2024) 수립('19.9)
  - \* (주요 전략) 대학 혁신 역량 제고, 전략적 특성화 역량 제고, 고등교육의 사회적 가치 및 체제 개선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23.1, ('23)9.74 → ('24)15.53조 원)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24.2.~)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인재정책실장, 교육부 차관 주재 회의(총 3회, '24.6., '24.8., '24.10.)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타 부처 관계자 의견수렴('24.8.)
- 대학, 유관기관 등 의견 수렴(대면 및 서면 등, '24.8.~12.)
-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안)' 보고('24.11.)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 관련 국회 토론회('24.12.)

## II. 고등교육 여건 진단

### □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반해 대외 경쟁력은 답보 상태

-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여파에도 **보편화 단계**의 지속,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학생 수 증가** 등 양적 규모 확대
  -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23) / 외국 학생 수(만 명): (’20)16.0 → (’24)20.9 (KEDI)
-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도 더불어 증가
  - \* 중앙·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조 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18) 13.7 → (’22) 17.8
- 반면, 국제 수준 대비 낮은 투자\*와 개별대학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요구 부합도 등에 기인한 대외 경쟁력\*\*은 약세
  -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573\$로 OECD 평균(20,499\$) 3분의 2 수준(OECD, ’24)
  - \*\* ‘THE 세계대학평가’ 개별대학 순위가 반영되는 대학교육 지수(22→12위) 상승 반면, 대학 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는 전체 67개국 중 46위로 하위권에 위치(IMD, ’24)

### ▶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탄탄한 재정지원 필요

### □ 정부 주도 대학지원에서 대학 자율성 기반 교육혁신으로 전환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별 맞춤형 관리\* 및 성인 학습자 증가에 따른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확대\*\* 등 대학의 체질 개선 지원
  - \* 대학 구조개혁 평가(’15), 대학 기본역량 진단(’18, ’21) 등을 통한 재정지원 실시
  - \*\*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3년~’27년)」 中 6대 핵심과제 ⇒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추진(’23, 교육부)
- 기본역량진단 등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개편(’23.3.)
  -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발표(’23.3월, 교육부)
- 재정난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및 단선적 성장경로에 집중 투자로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의 한계\* 등 대학의 체질 개선 미흡
  - \* 성인 학습자(25~79세)의 (형식)평생교육 참여율(교육부, ’23) : (’19) 1.5% → (’23) 0.6%

### ▶ 생애 전 주기 교육 수요 맞춤 대학 자율 혁신 필요

## □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의 악순환 심화 우려

- 미충원 학생 수 증가, 취업률 감소 및 지역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등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저하 추세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22. KEDI): (비수도권) 68.5% vs. (수도권) 71.2%
  - \* 최근 10년간 학생 수 비중('24. KEDI) : (비수도권) 61.2% → 57.1% (수도권) 38.8% → 42.9%
- 이에,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RISE 체계\* 및 글로벌대학 선정\*\* 등 지역 밀착형 대학 혁신 제도 착수
  - \* 경남 등 7개 지역 시범 선정('23년) → 17개 전 시·도 전담 조직 구성 완료('24년)
  - \*\* 30개교 지정 예정('23~'26년), 교당 최대 1천억 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 대학은 지역 인적·물적 자원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투자 필요
  - \*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억 원, KEDI): (전북대) 8,143 (상지대) 2,153 (울산대) 1,193

## ▶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혁신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 본격화

## □ 미래 환경에 대비한 대학의 교육·연구 시스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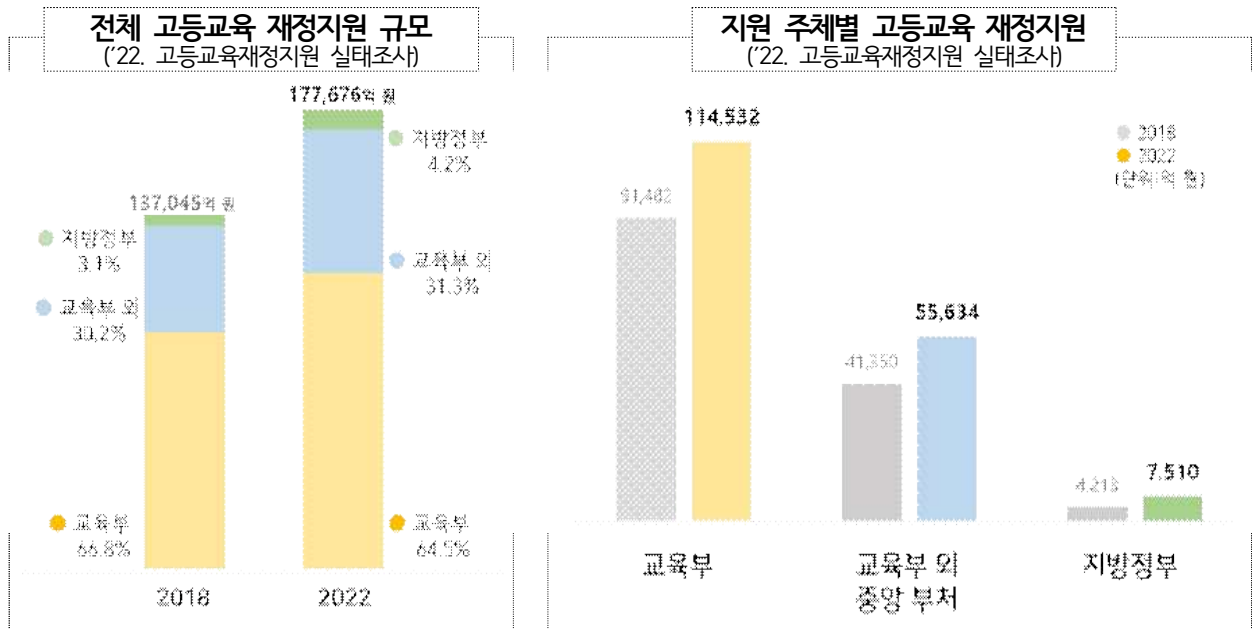
- 생성형 AI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첨단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 향후 5년('23~'27년)간 디지털, 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5대 신기술 분야에서 약 34.5만 명의 인력 부족 현상 발생 전망(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에, 반도체 분야 등 사업 신설·중액\*, 각종 규제 개선\*\* 및 학술 연구 지원\*\*\* 등 대학을 통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 캠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및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20.)
  -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R&D) ('20.) 3,839억 원 → ('24.) 5,246억 원
- 향후, 디지털 전환(DX)은 경제 생산성 향상의 혁신 패러다임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 양성 핵심 기관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 증가
  -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기업은 9.7%, 전담 조직 보유 기업은 2.1%, 전담 인력 보유 기업은 6.2%에 불과(산업기술진흥협회, '21)

## ▶ 산업구조의 빠른 전환에 대학의 능동적 변화·혁신 필요성 확대

### Ⅲ.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

#### 1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 (총지원 규모)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총규모는 최근 5년간 13.7조 원('18년)에서 17.7조 원('22년)으로 연평균 7.4% 지속 증가 추세



- 다만, 국가 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 지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GDP 대비 1.0%)보다 낮은 수준 지속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OECD 교육지표, '24) >

(단위: %)

기준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21년	한국	3.4	0.2	3.6	0.7	0.9	1.5	4.1	1.1	5.2
	OECD 평균	3.2	0.3	3.4	1.0	0.5	1.5	4.2	0.8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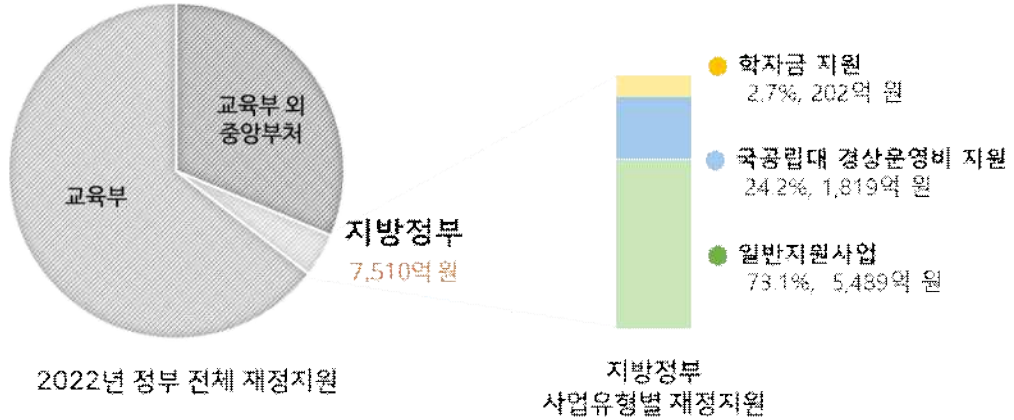
- (지원 주체)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교육부 중심(64.5%)\*으로 추진

\* 교육부 외 중앙정부 재정지원 규모('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5조 원(19.6%), 산업통상자원부 0.57조 원(3.4%), 고용노동부 0.47조 원(2.8%) 등

- 지방정부는 지원 규모의 확대('22. 0.75조 원)에도 전체 고등교육 재정 지원 중 낮은 비중(4.2%)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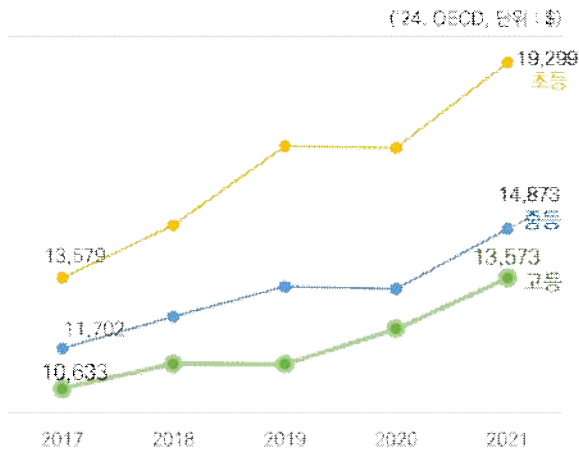
※ 지방정부 주체별 지원 : 지자체 7,113억 원(94.71%), 시·도교육청 397억(5.29%)

지방정부 지원 분야별 재정지원 규모 ('22. 고등교육재정지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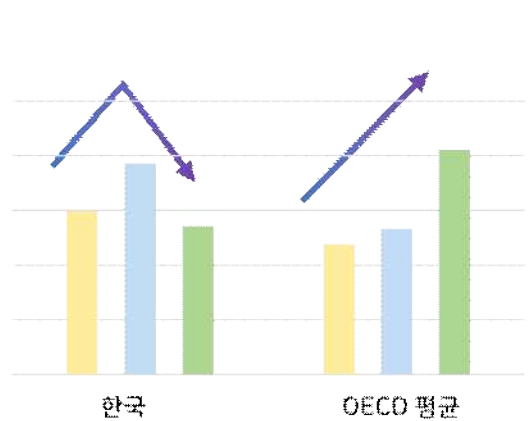


- (교육단계별 비교) 교육 분야 예산('24) 총 95.8조 원 중 고등교육 분야는 총 14.5조 원으로, 총예산의 약 15.1%에 불과
- 또한,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21)는 \$13,573으로, OECD 평균 (\$20,499)의 66.2%, 초등교육의 70.3%, 중등교육의 91.3% 수준
- 대부분 국가에서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1인당 공교육비가 높아지나, 우리나라는 초·중등 단계와 고등 단계의 격차가 지속 심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 ('24. OECD 교육지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24. OECD 교육지표)



- (지원 목적) 학자금 지원 및 국립대학 운영 지원이 높은 비중 차지('22 53.0%)
- 최근 5년간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규모 비중은 감소하고,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의 비중 확대
-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6조 원 규모로 세계 최상이나, 연구주체 중 대학의 비중은 9.1%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고등교육 분야 사업 유형 및 목적별 지원 규모** (교육부) >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22
사업 유형별	일반지원사업 (아래 두 유형을 제외한 사업)	53,588 (40.34)	79,906 (46.96)
	학자금 지원 사업	39,767 (29.94)	43,984 (25.85)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사업	39,478 (29.72)	46,276 (27.19)
사업 목적별	인력양성	58,215 (43.83)	64,314 (37.80)
	연구개발	31,095 (23.41)	41,873 (24.61)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4,044 (3.04)	16,734 (9.83)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39,478 (29.72)	46,276 (27.19)
	기타	0 (0.00)	968 (0.57)

- (지원 대상) 2022년 기준 사립대학(8.98조 원, 52.8%), 4년제 대학(14.85조 원, 87.4%), 비수도권(10.61조 원, 62.3%) 중심으로 지원

< **유형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고등교육 재정지원 실태조사) >

(단위: 조 원, %)

년도(비중)	설립유형별		학제별		소재지별	
	국·공립	사립	대학	전문대학	수도권	비수도권
2018	6.24 (47.0)	7.04 (53.0)	11.27 (85.2)	1.96 (14.8)	5.11 (38.5)	8.17 (61.5)
2022	8.04 (47.2)	8.98 (52.8)	14.85 (87.4)	2.14 (12.6)	6.41 (37.7)	10.61 (62.3)
학생 수(명)	524,649	1,792,584	1,899,857	407,839	1,126,491	1,190,742
학교 수(교)	58	355	223	145	171	242

- (설립유형별) '국립대학 운영지원'을 제외한 교당 재정지원 규모는 국·공립대학은 330억 원, 사립대학은 166.5억 원으로 국·공립대학의 50% 수준
- (학제별) 전문대 지원 비중 지속 감소('18년 14.8% → '22년 12.6%)하였고, 대학 1교당 지원액(434.7억 원)은 전문대학(121.1억 원)의 3.6배 수준
- (소재지별) 수도권 대학 지원 비중('18. 38.5% → '22. 37.7%)은 소폭 감소, 비수도권 대학의 지원 비중('18. 61.5% → '22. 62.3%)은 소폭 증가

## 지난 5년간('20~'24) 교육부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 □ 대학의 자율 혁신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 대학별 자율혁신 계획에 따른 미래인재 양성 지원  
※ 대학혁신지원: ('22) 7,530 → ('24) 8,852억 원 / 전문대학혁신지원: ('22) 4,020 → ('24) 6,179억 원
- **(국립대학 여건 개선)** 국립대학 역량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충 등 개선  
※ 국립대학교육기반조성: ('22) 4,695→('24)11,080억 원 / 국립대학시설확충:('22) 7,430→('24)10,470억 원

### □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첨단 인재 양성 지원)**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 신설 국가 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및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정 등 추진  
\* ('22) 420→('24) 1,187.95억 원 / \*\*('21 신규) 816 → ('24) 2,010억 원 / \*\*\*('23, 신규) 540 → ('24) 1,175억 원
- **(기초학문 지원)** 대학의 본질적 역할수행을 위한 연구 및 기초학문 지원을 위한 연구장학금·장려금 지원 확대 및 연구지원 체계 구축·개편 추진  
\* BK21: ('22) 4,081→ ('24) 5,247억 원 / Top-Tier 연구장려금: ('22) - → ('24)109억 원  
G-LAMP: ('23 신규, 총 8교) 160 → ('24, 총 14교) 516.7억 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23. 신규, 총 5개 컨소시엄) 150→('24, 총 8개 컨소시엄) 240억 원
-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전환 지원)** 지역 성인 학습자 재교육 및 경력 재설계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 '대학의 평생교육체제(LiFE)사업' 지원  
※ ('19~'22) 매년 약 241억 원 → ('23~'24) 매년 약 510억 원

### □ 지역·산업·학교 간 협력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 활성화)** 대학 산학연협력 성장 모형 확산을 위한 LINC 3.0 지원  
※ 일반대: ('21) 2,957 → ('24) 3,025억 원 / 전문대: ('21) 945 → ('24) 1,045억 원
-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RIS 추진  
※ ('22, 4 + 2개(신규) 플랫폼) 2,440 → ('24, 9개 플랫폼) 3,420억 원
- **(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와 전문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기술인재 양성 및 중장년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  
※ 1유형(기초) 45개 컨소시엄, 810억 원 지원, 2유형(광역) 5개 컨소시엄, 90억 원 지원
- **(지자체-대학 협업체계 활성화)** 지역 - 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RISE 시범지역 운영 (7개 지자체, '25 소 지역 실시) 및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추진  
\* ('23) 10개 내외 → ('24) 10개 내외 지정

## 2 대학의 재정 여건

-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은 증가한 반면, 대학 자체 수입은 감소
    - (국·공립대학) 2022년 기준 총세입 규모는 6.2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2.6% 증가\*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자체 수입은 감소
      - \* 국가장학금 포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에 기인
      - \*\* 자체 수입금 중 수강료 현황: ('18) 1.4조 원(67.2%) → ('22) 총 1.2조 원(50.3%)
    - (사립대학) 2022년 교비회계 기준 총세입 규모는 약 18.8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등록금 수입\*은 감소, 국고보조금 수입\*\*은 증가
      - \* 등록금 수입(단기수강료 제외, 조 원) ('13) 10.3 → ('22) 9.7조 원(△0.6조 원)
      - \*\* 국고보조금 ('13) 1.9 → ('22) 3.4조 원(국가장학금 2.3조 원 포함, +1.5조 원)
    - 특히, 사립 전문대학은 일반대학 대비 낮은 신입생 충원율\* 등으로 등록금 수입 비중\*\*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 전문대학 ('20) 93.7%→('23) 89.0%(△4.7%), 일반대학 ('20) 87.6%→('23) 85.3%(△2.3%)
      - \*\* 등록금 수입: ('13) 2.8조 원(57.3%) → ('22) 2.2조 원(49.8%) (△0.6조 원)
  - 수도권 대비 지방대학의 재정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대비 광역권·지방소재 대학의 수입 감소 추세가 더 큰 경향
      - \* 최근 5년 등록금 수입 2,499억 원 감소하는 동안, 수도권 대학은 632억 원 증가, 반면, 광역권 및 지방권 소재 대학은 각 1,231억 원 및 1,900억 원 감소
    - 대학 학령인구(만 18세) 급감이 시작되는 2030년을 기점으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은 재원 부족 심화 우려
      - \* '13년 대비 '23년 지역대학 입학생수 81,326명 감소(329,836명→248,510명) 및 신입생 미충원율 3.2%p 증가(2.8%→6.0%), '23년 파산으로 인한 첫 폐교 사례 발생
  - 등록금 중심의 단조로운 재정 수입 구조에서 재원 다각화 모색 필요
    - 산학협력단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 수익 중 정부·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익이 85.3% 이상으로 산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 저조
- ▶ 안정적이고 다양한 재정 수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 필요**

< 참고 :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022년, 고등교육 재정분석보고서) >

(단위: 백만 원, %)

구분	등록금	국가보조금	교육 수입	교육 외 수입	기부금	전입금	기타	총계
수입	9,815,470 51.4%	3,490,089 18.3%	1,471,595 7.7%	364,325 1.9%	492,973 2.6%	1,499,912 7.8%	1,976,753 10.3%	19,111,118 -
구분	보수	학생경비	관리 운영비	연구비	입시관리	교육 외 비용	기타	총계
지출	7,900,642 41.3%	2,178,462 11.4%	443,754 2.3%	5,287,215 27.7%	151,048 0.8%	72,621 0.4%	3,077,274 16.1%	19,111,118 -

□ 높은 경직성 경비 비중 등으로 대학의 가용 자원 감소

- 인건비가 약 40% 내외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구조
  - ※ 대학 유형별 인건비 비중: 국공립대 49.5% > 사립대학 41.3% > 사립전문대 36.0%
- 국가장학금의 지속 확대로, 대학 교내 장학금\*의 확대를 위한 연구 학생경비\*\* 금액도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가용 자원 감소
  - \* 사립대학 연구학생경비 현황: ('13) 5.2 → ('22) 5.8조 원(국가장학금 등 +0.6조 원)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부령) 제3조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함

□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 여건 미흡

-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로 대변되는 실험실습비, 기자재 매입비, 도서구입비 등 자산 및 부채지출은 감소 추세
  - ※ 최근 10년 사립대학의 자산 및 부채지출 비중은 15.9%('13) → 11.1%('22)로 감소
- 박사급 연구원의 54.2%(67,351명)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학 내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공공연구기관 등 보다 낮음
  - \* 공공연구기관(297.6백만 원) > 기업체(201.7백만 원) > 대학(89.7백만 원)(KISTEP, '22)

□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재정 혁신 노력 병행 필요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와 관련된 지출 소요 증가로 재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
-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한시성 등 대학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필요
  - ※ 학과 간, 학교 간, 지역 간 벽 허물기, 대학 현장 수요와 괴리된 사업 및 대학의 재정적 자립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 완화 필요

▶ 재정 낭비 요인의 과감한 제거와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로,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학 재정 모델 확산 필요

## IV.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 1 추진 체계도 및 재정지원 구조

#### □ 추진 체계도



## □ 재정지원 구조




- **(일반 재정지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대학별로 자체 계획을 수행하도록 블록 편당(묶음 예산) 형태로 지원
  - (대상)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또는 경영위기대학 지원 제외
- **(RISE)** 대학-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RISE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을 지원
  - (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대상 결정
    - ※ 단,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또는 경영위기대학 단독 지원은 불가
  - (규모) 교육부 특수목적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RISE로 전환
- **(특수목적 지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대상) 부처·부서별 사업계획에 따라 대상 설정
    - ※ 단,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대상 대학의 경우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참고 가능

[참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체계도

2018 개편	2019~2024		2025~ RISE 전면 도입			
구분	주요 재정지원 사업		구분	특징	지원 대상	
일반재정 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		⇒ <b>일반 재정지원</b>	✓대학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연구의 자율 혁신 추진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또는 경영위기대학 지원 제외	
	전문대학혁신지원					
	국립대학 육성					
특수목적 지원사업	LINC+	LINC 3.0	⇒ <b>RISE</b>	✓대학-지역 협력하여 RISE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추진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지역에서 지원 대상 결정	
		LiFE				LiFE 2.0
						RIS
						마이스터대
						지방(전문)대 활성화
						HIVE 등
	BK21플러스	4단계 두뇌한국21				
	학술진흥		⇒ <b>특수목적 지원</b>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첨단인재 등 필요한 분야 집중 지원	✓부처·부서별 사업의 목적에 따라 대상 설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K-MOOC 등 기타 특수목적 지원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운영 지원 등			국립대학 운영 지원 등			
그 외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그 외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 2 3대 재정지원 전략

### 1) 재정지원 확대

중앙정부 재정 지원 	지자체 중심 재정 지원 	대학 자체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li> <li>✓ 중앙정부 핵심사업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SE 체계 본격 도입</li> <li>✓ 지자체 매칭 투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 등 통한 수입 확대 지원</li> <li>✓ 관련 규제 개선 검토</li> </ul>

#### 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확대

- **(유효기간 연장)**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효기간은 2025.12.31.까지

- **(목적 및 지원 범위 명확화)**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세출 범위에 대한 재설정을 통해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

- 특히, 국세 교육세 일부를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 세출 범위 개정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역할 확대\* 도모

\*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연계,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성인 학습자 대상의 직업 전환 및 재교육 지원 등 생애 주기 전반의 교육기여 확대 유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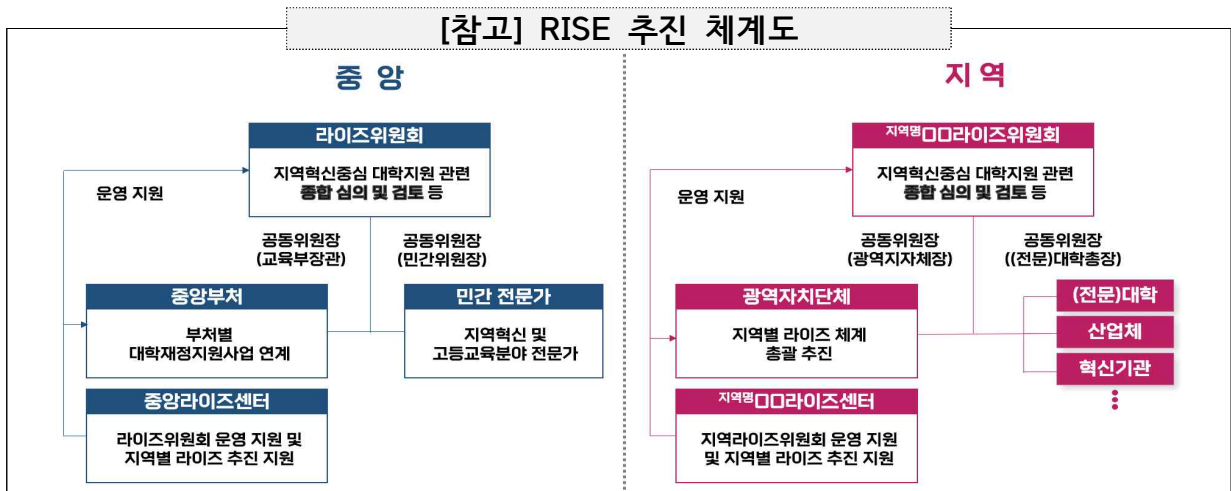
과제	현재	개선 방향(예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 (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li>✓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 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li>✓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li>✓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지원</li> <li>✓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li> <li>✓ 대학의 지역사회 유초중등교육 연계 확대 지원</li> <li>✓ 직업교육 고도화 지원</li> <li>✓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지원 등</li> </ul>

- **(재원 확충)** 고등·평생교육 분야 정부 부처 재정지원 사업 발굴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확대 추진 등 재원 다각화 모색

- 부처별 소관 분야 인재 양성, 연구 활성화 등 고등교육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지속 발굴

## ②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지원 확대

- **(기본 방향)**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hub)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동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 구축
  - 대학 재정지원 권한의 위임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 전략과 실정을 고려한 지역 혁신·성장계획 수립
- ※ [4대 성과목표(안)] ①지역정주형 인재양성 ②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③직업·평생교육 혁신, ④지역 현안 해결



- **(투자 확대)** 교육부 특수목적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RISE로 전환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지방대 육성 등) 추진
  - \* 대학의 사회적 공헌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 유·초·중등 지원 등
  - 2025년부터 국고 2조원 이상을 RISE 체계를 통해 대학 지원
  - RISE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24년) 국고 1조 2,025억 원 → ('25년) 국고 2조 10억 원 + 지방비(4,000억 원+α)
  - 지역발전을 위한 타 부처(산업부,과기부,중기부 등)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RISE와 연계(유형①정책메뉴판,②예산 집행기관 통일,③RISE 예산 통합)
- **(법적 근거 정비)**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 관계 법령상 지자체의 역할 확대 규정
  - 지자체의 선언적인 대학지원 근거 규정에서 탈피하여 지역맞춤형 대학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개정
  - ※ (고등교육법 개정안) 지자체장의 대학에 대한 실질적 행·재정적 지원 근거,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권한 등 지자체 장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보완 등

### ③ 대학의 수입 구조 다각화

- **(재정 수입 다각화 지원)** 대학의 역량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발굴·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 우수 대학 벤치마킹을 통해 재정 혁신 고도화 사례 발굴 및 모델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확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참고] 해외 대학 재정건전성 확보 사례

- ✓ (Harvard) 대학 기금(펀드)을 관리하는 법인(HMC)을 구성하여 투자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투자 관리를 통해, 대학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 ✓ (Stanford) 창업지원 프로그램(StarX)을 통한 창업가 육성 및 기술 라이선스 수익(OTL) 등을 통한 대학 재정확보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업 연구소와 수요 기반 R&D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대학 역량 강화\* 지원
  - \*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역량 강화 교육을 전체 대학까지 확대, 이공계졸업자의 기술 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 지정·운영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과 인재양성·R&D 및 기술사업화 등 분야별 연계·협력 지원을 강화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지평 확대
  - ※ RISE(교육부) 및 Uni-core(과기부) 연계 등을 통해 시·도별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
-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성과 발굴 및 후속지원을 통해 기술 이전·사업화 활성화로 기술이전 수익 등 확대 추진
  - \*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23년, 1,005억 원), 대학기술지주회사 수익('22년, 370억 원)
- **(관련 규제 개선)** 대학의 재정 운용 책무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개인과 대학 법인의 대학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검토
  - 기본재산 관할청 신고 범위 가액 상향 조정\* 등으로 대학의 재정 운용 자율성 부여
    - \*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신고 처분 가액 규제 완화 (5억 → 20억 원 미만)
  - 대학의 기부 수입 확대를 위해 개인의 소액 기부 소득세 공제, 운용수익을 수익용 자산 재투자시 법인세 면세 추진
  -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성장을 위한 관련규제\* 완화 추진
    - \*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30% 초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율(10% 이상)을 설립 시에만 충족하도록 변경(산학협력법 개정)

## 2) 전략적 배분 및 활용

구분	재정 지원 대상 질 관리	전략적 재정 배분	자율집행 통한 효율성 증진
일반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평가인증 미인증, 경영위기 대학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자체 발전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편당 방식 지원</li> </ul>
특수목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지원 목적에 따라 소관 부처·부서에서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재정지원 기본계획, 사업별 기본계획 등 투자 전략 수립</li> <li>✓고등교육재정지원 위원회 조정 심의</li> <li>✓사업위원회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법령에 따른 집행 기준 외 별도 지침 등 규제 최소화</li> </ul>
R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별 RISE 계획 수립</li> <li>✓지역라이즈위원회 조정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내 수주 사업 간 연계성 강화 및 집행 경직성 완화</li> </ul>

### ① 재정지원 대상 질 관리

- **(기본 방향)**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통해 투자 가치가 있는 대학 대상 자율 혁신 통한 체질 개선 뒷받침
  - ※ 경영위기 대학과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은 일반재정지원 제외, 다만, 경영위기 대학 해제 및 기관평가인증 조건부 인증 이상 획득 시 다음 학년도부터 지원 가능
- **(재정진단 통한 구조개선)** 대학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체불임금 유무 등의 정량지표로 재정건전성 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촉진
  - 대학 재정분석 기반으로 유형별 구조개선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대학의 과감한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경영 위기 극복에 기여
    - \* 재정 개선 및 구조개혁을 위한 경영자문 시나리오 제공 : △종합적 회생모델 △가치 산정 모델 △경영혁신 모델 △적정 규모화 모델 △소규모 특정목적대학 모델 △지역 특성화 대학 모델
  - 구조개선을 지원할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구조개선 추진 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이행 촉진을 위한 회계·재산상 규제 특례 허용
- **(원활한 폐교·청산 지원)**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에 퇴로 유인책\*을 제공
  - \* (예)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등 퇴로 방안 마련

- 폐교 후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 지원\* 등을 체계화
  - \* 자산매각 관리, 임금 체불 등 채무변제, 청산절차 운영비 지원 및 청산협의체 운영 등
- 적기에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인 청산 유인책(인센티브 등) 마련 추가 검토
- **(사립대학 혁신 모델 창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혁신 선도 모델의 실제 구현을 지원함과 동시에 성과를 확산
  - \* 대학이 지역 여건에 기반하여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시하고, 재정투자(Public Venture Capital)와 규제개혁으로 성과 창출 및 확산(26년까지 30개 지정, 교당 평균 천억 원)

**[참고] 글로벌대학 혁신 계획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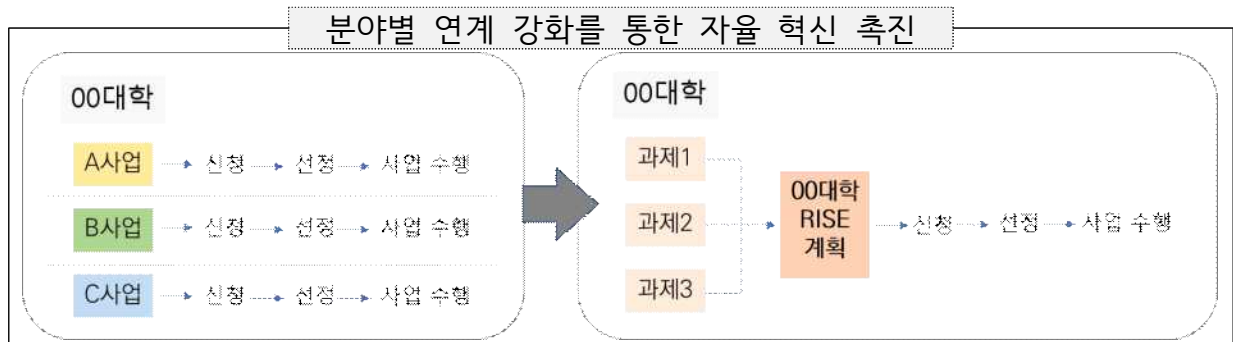
- ✓ (포항공대) 글로벌 지원금을 기반으로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대학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확립
- ✓ (동아대-동서대) 수익형 통합 산단 및 외부 전문 경영인 체계 도입
- ✓ (대구한의대) 해외 한의학 교육과정 수출 및 제품 개발, 기술이전 및 제품 수출

## ② 재정 배분 효율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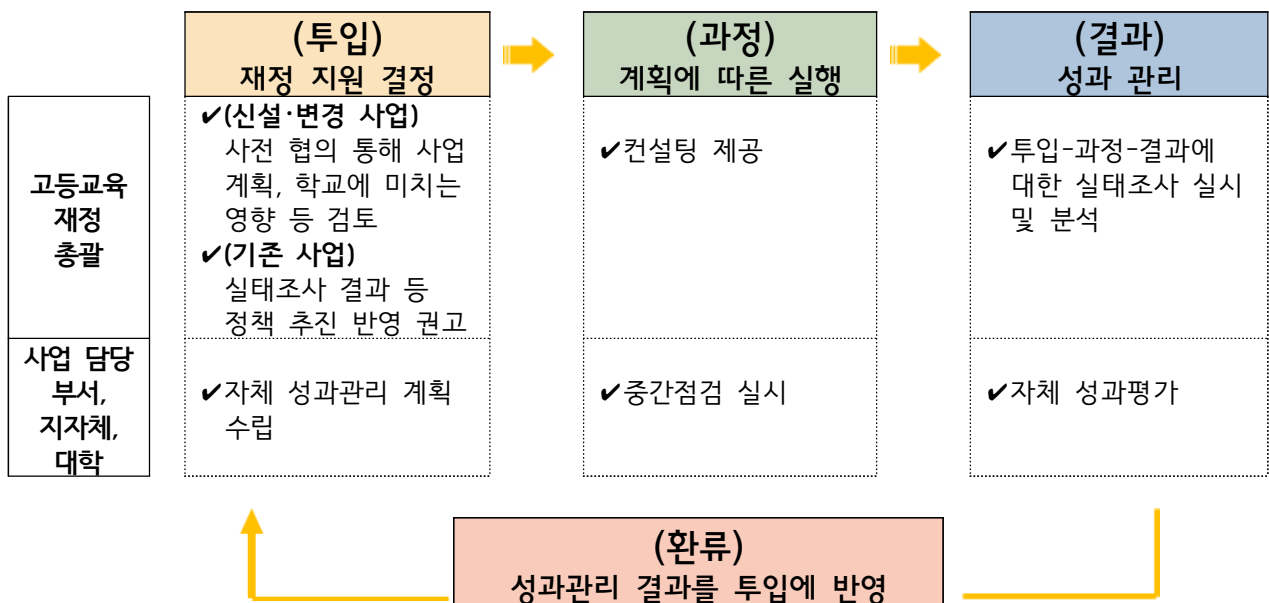
- **(총괄 관리 기능 강화) 범부처 차원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 재정 배분 지원 체계 구축
  - \*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 [참고]
- 고등교육 재정전략 수립(기본계획, 연도별 지원계획), 재정지원 사업의 조정·협력 등 심의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전략 포럼\* 운영
  -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 현장 안착, 제안 사항 청취 등 대학 재정 혁신을 위한 포럼 개최
- 고등교육 재정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 협의제도 활성화
  - ※ (협의 사항)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의 신설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와 성과관리 계획 등
- **(지역 내 배분 역량 증진) RISE 사업의 경우 '라이즈위원회'**를 통해 시도별 예산 배분 기준을 수립
  - 지자체는 지역 RISE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라이즈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 및 대학별 예산 배분 추진
  - 시도별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지역 RISE센터 역량 강화 지원 등 대학지원사업 운영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 ③ 대학 재정집행의 자율혁신 촉진

- **(집행 자율성 강화)** 대학 자체 여건 및 특성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블록 펀딩 방식으로 지원
  -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 기준 외 별도 지침을 통한 규제는 최소화
    - ※ 현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는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한도 내,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경상비는 총액의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분야별 연계 강화)** 지역별 RISE 계획 기반으로 사업을 일괄 공모하고, 대학은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패키지로 신청·집행
  - 대학 특성화 분야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들을 신청
  - 대학 내 수주 과제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성과 극대화 유도
    - ※ 단위 과제별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범위에서 대학의 칸막이 없는 예산 사용 허용 검토



### 3) 성과관리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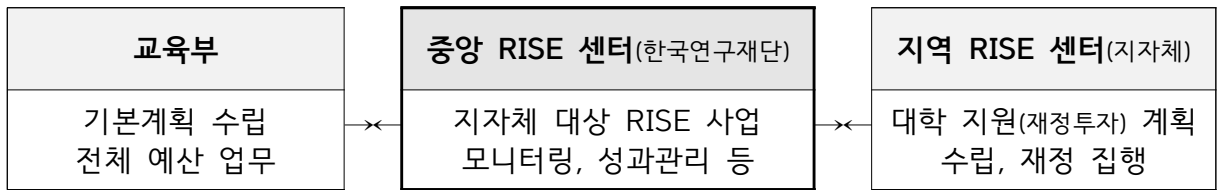


## ① 재정지원 성과 환류 체계 구축

- **(기본 방향)** 중앙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총괄 분석을 통해 사업 성과 분석, 사각지대 발굴 등 재정 투자의 효과성 제고
- **(실태조사 운영)** 지원 주체별, 사업 목표, 사업 방식, 성과 등 재정 지원에 대한 투입-과정-결과를 총체적으로 조사·분석
  - ※ 「고등교육법」 제7조의2에 따라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 가능
  - ‘통합 실태조사 매뉴얼’ 수립하고, (가칭)고등교육재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실시
  - 중앙정부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고등교육에 전략적 재원 투자를 위해 성과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 심층 분석 실시
    - ※ (심층 분석 예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대학의 재정 자립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등
  -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
- **(데이터 관리 강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현황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 대학 일반 현황, 재정 여건(회계 세입, 세출 등), 재정지원 사업(사업 수,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등) 등 관련 통계 취합 및 분석 실시
    - ※ (현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공시 및 통계 정보 등을 분절적으로 공시 → (개선) ‘지원센터’ 중심으로 관련 통계 재가공 및 성과 분석에 활용
  - 고등교육 관련 주요 성과지표 통합 분석·관리,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 및 재정지원 사업 관련 이슈 모니터링 등 수행

## ② 지자체 중심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기본 방향)** 지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 RISE 센터 중심으로 각 지역별 RISE 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수행



- **(성과관리 구조)**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은 평가 계획을 수립, 매년 단위 과제별, 프로젝트별 목표의 달성도를 자체 점검·환류
  - 교육부는 지역별 RISE 진행 상황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지역별 핵심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예산배분 및 컨설팅 실시
- **(성과평가 결과 활용)** 사업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연차점검-중간-종합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설계·집행 및 예산지원 시 활용
  - 지역 주도의 자율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를 바탕 평가 추진
    - \* 지자체와 대학 간 공동으로 설정한 성과지표 반영하여 지자체 책무성 제고
    - \*\* 핵심 성과지표는 필수 관리 지표로서 시도가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지표

### ③ 대학 성과관리 역량 강화

- **(기본 방향)**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 기본계획 및 부처별 성과계획에 따라 평가,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 수행
  - **(통합 성과관리 지원)** 개별 사업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등 대학의 자율적 성과관리 여건 개선
    - 대학 차원의 전략계획 수립,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학기관연구(Institutional Research, IR)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 ※ 조사 대학(138개) 중 성과관리 전담조직 운영 대학은 73.9%, 통합 성과관리 DB구축 55.0%, 전문연구원 확보 비율은 석사 24.8%, 박사 10.9%에 불과(23. 교육부)

#### [참고] 해외 대학 대학기관연구(IR) 사례

- ✓ **(Harvard, OIRA)** OIRA(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 & Analytics)은 대학의 의사결정과 전략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확산을 통해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 대학의 전반적인 효과 향상 및 대외적 영향력 향상에 기여
- ✓ **(MIT, IR)** 부총장 산하 조직으로 1986년 기획부서의 일부로 시작돼 수년에 걸쳐 성장, 현재는 MIT의 지도부와 커뮤니티에 고품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학내 의사 결정에 영향

## V. 중점 재정지원 과제

### 1 대학의 자율혁신 역량 제고

◆ 대학의 자율 혁신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혁신 및 산·학·연 협력 강화

#### □ 대학의 자율 혁신 고도화 지원

-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블록편당 방식의 재정지원 추진
  - 교육 혁신 적극 추진 대학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수사례 발굴·확산
- 국립대학의 기초·보호학문 발전 등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및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해 자체 발전계획 기반의 자율 혁신 뒷받침
- 대학구조개혁,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립대학 구조개선 및 경영지원, 평가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등 대학의 체질 개선 도모

#### □ 산·학·연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산·학·연협력 선도모델 고도화 및 후발 대학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 유망기업을 대학 내에 유치 산·학·연협력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간적 연계를 위한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실용화 및 후속 연구 지원으로 국가 전략기술 및 지역 특화산업 기술이전(BRIDGE 3.0)·사업화 촉진

## 2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지원

### ◆ 지역 대학과 지자체 중심 지역 혁신 체제 구축 중점 지원

#### □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선도모델 창출

-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할 때 시너지가 큰 주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RISE 중심 개편 추진
- 대학 간 자원을 집약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글로벌 대학 지원

#### □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확산

- 대학 간 통합·연합, 대학-연구기관 클러스터, 대학-산업체 간 Start-up Village 등 대학과 다양한 주체 간 벽 허물기 집중 지원
- 지역 대학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업-취업-정주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및 양성 추진

####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역할 확대

- 대학-교육청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지원
- 대학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첨단기술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학생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추진
- 고등학교-(전문)대학-산업체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 전략·선도 산업 기술인재 양성 지원

### 3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

◆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의 질적 성과 제고를 통해 국가혁신 선도

#### □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학술연구의 지속성 제고

- 연구장학금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등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의 기반이 되는 우수 인재 유치 및 안정적 학업·연구 환경 조성
- 대학원 학위과정 및 졸업 후에도 연구자로 지속 성장(펠로우십→경력개발→연구직 진입)할 수 있도록 중단없는 연구 활동 참여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한국형 Stipend)을 통해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의 일정 비율 이상 지원

#### □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연구중심대학 도약

-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국내·외 연구소(연구자) 간 융복합 연구를 추진하고, '인문+이공' 등 학제 간 융합연구로 새로운 지식 창출 및 난제 해결
- '대학연구혁신 100' 등을 통해 인문·이공분야 대학연구소가 지역발전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다양한 대학원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대학본부 중심 대학원 혁신지원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체제 강화
- 대학원 역량 향상을 위해 학문분야(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별 우수학과(BK21 교육연구단(팀))를 선정하여 연구장학금, 국제화 경비, 운영비 등 지원

## 4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포함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 양성 지원

### □ 인재양성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지원

- 첨단산업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지원
- 첨단분야 교육 역량 보유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공유,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첨단분야 핵심 인재 양성 집중 지원
- 대학 안팎의 협력을 통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 □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탄탄한 제도·인프라 마련

- 학사 운영 유연화, 학점인정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신기술) 분야 유연한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이 첨단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도록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첨단 실험·실습기반 구축 등 인프라 개선 지원

### □ 취·창업 교육을 통한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 강화

-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대학창업펀드 확대 조성 등 창업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으로 대학 중심의 창업 교육생태계 활성화
- 대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연계 교육·장학금 지원 및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활성화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첨단분야 대학원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참여 유형 신설 등을 통한 산업 수요 맞춤형 채용 연계 교육 활성화

## 5 평생·직업교육 역량 증진

◆ 학령인구 감소,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직업교육 고도화 지원 및 평생교육 기능 강화

### □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

- 현장 중심의 모듈화된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입학전형 및 학사제도 운영 등 성인 친화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확산
- (전문)대학 내 관련 학과, 지역 내 교육수요, 구직수요 등을 반영하여 학점인정 과정, 비교과 과정 등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 □ 디지털·AI 전환을 위한 성인의 역량 강화 지원

-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수준별 디지털 교육과정 제공(리터러시→기초역량→전문역량)
- 사이버대학의 접근성 및 원격교육 노하우를 활용한 온라인 성인 학습자 및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 확대

### □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술 인재 집중 양성 지원

- 지역 특화분야 맞춤형 학과와 연계한 직업교육 심화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활성화
- 전문대학의 교육혁신을 통해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체계적·장기적 양성 및 성장경로를 제시할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전문기술석사과정) 내실화
-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학과 운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초·중급 전문인력 배출 지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6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입학-졸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 학비 부담 경감 및 분야별 인재 육성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
- 인문, 예체능, 이공계(과기부), 전문기술 등 각 분야별 우수장학금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 육성 및 학업 전념 여건 마련 지원

### □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 저금리 등록금·생활비 대출 지원 및 ICL이자 면제 대상 확대하고, 대학생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근로장학 지원 확대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 장학금 신설 지원

### □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 대학의 학생 선발 역량 강화와 대학혁신 흐름에 맞춘 종합적 대입전형 개선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도모
- 저소득층,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 대상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 성인의 우수한 고등교육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활용 및 디지털 도약강좌 확대

## □ 추진 배경

- 대학 혁신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목표 및 방향 수립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 ☞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고등교육법 개정, '22.3.1.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5개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구성 추진

## □ 주요 기능 (고등교육법 제7조의2)

- 고등교육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 여건 전망, 재정지원 배분 방향, 재정 지원 성과 분석 및 관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협의에 대한 심의·조정
  - 신설·변경의 근거, 세부 사업계획,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단기 및 중장기 예산 계획 등
- 그 밖에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재원 투자에 관한 사항

## □ 구성·운영 계획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5)

- (구성) 위원장 1명(교육부 장관)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교육부·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 (위촉위원)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당연직), 고등교육 및 재정 관련 유관기관, 고등교육재정 전문가, 청년, 여성 등 균형 배치
- (임기 / 개최 주기) 2년(중임 가능)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실무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안) 검토,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에 관한 심의(안) 논의 등 추진
  - ※ (구성) 당연직 및 유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교육 및 고등교육재정 전문가 등 10명 내외

## 참고2

##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및 재정지원 사업 구조

### □ 고등교육기관 범위 (교육기본통계 기준)

-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
- '11년부터 특별법 및 타 부처 설립에 근거한 고등교육기관 포함 (과학기술원, 전공대학, 기능대학 등)

(단위: 개교)

법령	구분	'24년(B)	
<b>총 계</b>		422	
「고등교육법」	일반대학	183	
	산업대학	2	
	교육대학	10	
	전문대학	130	
	방송통신대학	1	
	사이버대학	대학과정	18
		전문대학과정	2
	기술대학	1	
	각종 학교	대학과정	2
		전문대학과정	-
	대학원	대학원대학	41
대학부설 대학원		<1,179>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	전공대학		3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학과정	1
		전문대학과정	1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학과정	3
		전문대학과정	5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기능대학(폴리텍대학)		9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에너지공과대 등)		6
	대학원대학		3
	대학 부설 대학원		<12>
	전문대학(농수산대)		1

# □ 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조

2018 개편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기본역량진단 선정 대학을 일반재정으로 지원</li> <li>▷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교제 자율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회계 설치('23~)를 통한 재정 지원 확대</li> <li>▷ 대학이 지역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시범사업 운영</li> </ul> |
|-----------------------------------------------------------------------------------------------------------------------|--------------------------------------------------------------------------------------------------------------------------------|

2025 RISE 도입	2025~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재정/RISE/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li> <li>▷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23.3) 적용 시기 도래</li> <li>▷ 대학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RISE 도입</li> </ul> |
|--------------------------------------------------------------------------------------------------------------------------------------------------------------------|

일반재정 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국립대학 육성

⇒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일반 재정지원	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국립대학 육성

특수목적 지원사업	LINC+	LINC 3.0
	LiFE	LiFE 2.0
	RIS	
	마이스터대	
	HiVE	
	지방(전문)대 활성화	
	계약학과 등 8개 사업	
	BK21+	4단계 두뇌한국21
	학술진흥	
	첨단분야 인재양성	
K-MOOC 등		

⇒

대학-지역 협력 지원	
R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li> <li>•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li> <li>• 직업·평생교육 혁신</li> <li>• 지역 현안 해결</li> </ul>

⇒

국가 차원 필요 분야 집중 지원	
특수목적 지원	학술연구 역량강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K-MOOC 등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운영지원 등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운영 지원 등

그 외 정부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

그 외 정부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